
「강릉시민 자치권 확대 및 강화 방안 연구」

지방자치시민학교, 주민참여예산제 및
강릉 청년 열린 정치학교 관련 프로그램

[최종보고서]

2021. 10.



강릉시의회

목 차

1. 강릉시민자치대학교 개설 1 - 7
2. 강릉 청년 열린 정치대학교 개설 8 - 22
3.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안 8 - 22

1. 강릉시민자치대학교 개설

1) 시민자치대학교 개설 배경

지난 1995년 역사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2년 뒤 1997년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는 완전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 이상의 제도 운영에서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가 성숙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인 주민의 정책 참여 등 참정권을 일부만 허용하면서 단체자치에 비해 권한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단체자치와의 대등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였지만, 그 권한과 지위가 단체자치와 대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단체자치 중에서도 단체장의 권한은 이른바 ‘제왕적 지위’를 가진 반면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은 정체되었거나 약화되었다. 또 주민들의 참정권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었으며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도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과 1997년 자신의 손으로 단체장을 선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방자치위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자질이 수준이하인 사람들이 많았다. 또 지역 현안보다는 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적 쌓기 용 정책사업들로 인해 기대는 큰 실망으로 연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해야 할 일,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세 부담의 가중,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 등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시민단체의 결성과 새로운 방향의 시민운동 내지는 저항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합목적성, 투명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재임기간 동안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제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거나 수정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해 정치권에서는 협치(協治)라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이미 기울어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불균형적 내지는 기형적 현실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정부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지방자치의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시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개선작업은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큰 획을 긋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2018.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2020년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75년 만에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도도 전격 실시되었다. 이렇듯 지방자치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2022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의미는 더욱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위원회 연혁과 역할 변화<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도적 개선과 수정이 진행되었지만 지방중소도시는 여전히 주민자치의 경험을 단체자치 수준으로 올리고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민들에게 부여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 것도 현실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지역 개별적으로 특수성에 맞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 졌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로 결국 그 일은 각각의 자치단체가 저야 할 몫으로 남았다. 그렇다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 내지 변화 등의 방향성은 무엇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한 축소 및 지방정부의 역할론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계층균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7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직업, 소득, 학력 등에 따라 상층, 신/구 중산층, 하층 등 네 계층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상층은 보수, 신중산층은 진보 성향에 게 투표하는 계층분열이 뚜렷했다. 계층투표는 각 계층의 이념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용마 서울대교수,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계층균열 구조의 등장, 한국정치학회보 48집 제4호 249-270쪽, 2014)

계급균열 구조에 대한 서구의 뜨거운 논란에 비해 한국에서 계급균열 혹은 층균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계급균열이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정영태(1993a)가 1992년 대선을 분석하면서 수행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또 정영태(1993b)와 안희수·정영태(1993)는 1992년 대선직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와 중간층의 정치의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세 연구는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지역주의에 의해 희석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계급균열이 표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찬욱(1993), 이갑윤(1998) 등도 소득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계층균열 분석을 시도했지만, 역시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 매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균열 구조의 등장 배경과 원인, 그 해소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집중되었다(김만흠 1994; 박찬욱 1999; 2005; 손호철 1993; 안순철·조성대 2005; 이갑윤 1998; 2000; 조기숙 1997; 2000; 조성대 2004; 최장집 1996 등).

그런데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기점으로 기존의 균열구조에 대한 연구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지역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3김의 퇴장이 가시화되면서 지역균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어 새로운 균열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념균열 연구는 강원택(2002a; 2003; 2005)이 1997년 대선,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강원택은 한국에서도 이념균열이 표출되고 있지만, 서구와 달리 계급균열이 아닌 세대균열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세대균열(정진민 1992; 1998; 2008; 2012; 조중빈 2003; 황아란 2009)과 함께 탈물질주의에 따른 가치균열(김욱 2006; 마인섭 2003; 2004; 마인섭 외 1997; 이현출 2005) 등 이념균열 이외에 다양한 새로운 균열구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용마 서울대 교수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계층균열 구조의 등장, 한국정치학회보 48집 제4호 249-270쪽, 2014)

계층구조의 분열 현상은 최근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회계층의 균열이 주로 영호남의 지역균열 양상이었다면 2000년 이후의 양상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균열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념균열 양상의 출현이 지역균열을 뛰어 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균열의 양상이 고착화 된 가운데 새롭게 이념균열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대 나이, 60년대 출생, 80년대 학번, 이른바 586세대의 정치적 부상과 과거 민주화 운동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라는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미국 세대전문가인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1년 펴낸 책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에서 처음 언급)와의 충돌도 2000년대 이후 현재의 정치상황을 설명할 중요한 키워드 이다. 세대 간 균열양상이 중요한 이유는 586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간의 차이는 쉽사리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86세대는 국가와 민족, 통일의 개념을 중시하고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민주화의 결과를 대단한 업적 내지는 유산으로 여기고 있다. 가부장적 권위와 남성다움이라는 마초적 성향이 높아 독단적이며 고집이

세고 정치적 호불호가 분명한 편이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게임을 하면서 과제까지 한다. 멀티태스킹에 능하다는 의미다. 건강과 식생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이전 세대와 달리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한다. 이러한 세대 간의 경향 특성은 특히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에서 극명하게 대립되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적 특성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소지역이기주의와 전통적 이념의 대립에 따른 지역, 계층 간 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 후유증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민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표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제도는 없지만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방법의 일환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자치학교라는 것을 시행하고 또 앞으로 시행할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2) 시민자치대학교의 필요성

이와 함께 최근 주민자치에 대한 보다 세분화-전문화-특성화된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1년 2월19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4섹션에서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자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현재까지의 주민자치교육이 교육생의 참여 의지가 저하된 일방적, 형식적 교육에 그쳤다는 점에서 향후 주민자치교육의 목표를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력과 민주시민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기적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찬우 금강대 교수,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임정빈 성결대 교수,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장이 참여했다.

전은경 교수는 “지금까지 주민자치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사초청 특강의 떼우기식 교육이 주가 되는 탓에 호응도가 낮고 효과도 저조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션형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현안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운영, 주민조직화, 동기부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주민으로서 의무와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와 함께 강화된 교육운영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교육의 실질적 발전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전 교수는 우선 주민자치교육의 목표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고성과자들이 두각을 보이는 내적 특성이 역량”이라고 정의하며 “잡다한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강조하되 역량의 구성요소는 직업, 직무, 직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 기초역량, 전문역량, 핵심역량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주민자치력을 함양시키고 민주시민성을 배가시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강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교육강사는 전문성, 수업기술, 소명의식, 열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강사는 숫자와 역량에서 모두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질 높은 주민자치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및 풀 구축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민자치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과제에 대해 “자치분권 논의에 주민자치교육 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향후 주민자치 발전 논의에서 ‘주민자치교육’ 주제 상정이 요구된다. 주민자치교육 목적 및 내용,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주민자치교육 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 운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강사 양성과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보급도 필요하다”라며 “특히 주민자치(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정보 교류 및 학습에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칭)주민자치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으로 주민자치 분야의 연구개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주민자치교육을 법령화시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교육진흥 조항을 포함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표준조례안에도 주민자치교육을 지자체에 책무화시키는 조문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주민자치교육의 방향은 주민이 직접 만드는 민주주의에 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실수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배워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이며 애자일(agile: 신속한 반복 작업을 통해 실제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작은 구성 요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 이러한 방법은 적응형 접근 방식과 팀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념의 기민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위로 지향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위주의 경진대회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시행해 아젠다가 주민 사회 내부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이를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방향성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연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해 강릉시민자치대학교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이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의 대상, 시기 등 운영제도의 정립이다. 이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지방자치의 환경을 주민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이후 단체자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거나 후퇴한 주민자치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강릉시민자치대학 개설의 배경이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는 96개 시·군·구, 408개 읍·면·동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강릉시는 9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1조원이 넘는 한 해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강릉시의 규모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기능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회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상의 한계

이는 현행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범 설치·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주민자치회의 전국 확산에는 한계가 있어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성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협력형 주민자치회’ 구성을 권장함에 따라 대부분 해당 유형으로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유형(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이 있는데 이들과의 비교 검증이 적어서 각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수정보완과 추가 규정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사업범위가 불분명하며, 주민의 대표성도 미흡하다.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으나, 이 기능에 맞는 사업을 누가 선택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이고, 주민자치 위원은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핵심과 본질은 비껴간 대안에 그치고 있다. 이 말은 주민자치위원의 주민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주민자치위원을 맡아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높음과 같은 의미다.

개설될 강릉시민자치대학은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약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확산시켜 나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자치분권이라는 국정과제의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주민에 의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치대학교의 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 국내외 환경의 변화, 2019년 시작된 코로나 19의 확산은 주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과 마을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성 확보라는 차원, 그리고 이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가 이젠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자치대학교의 필요성



<자료: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홈페이지>

3) 강릉시민자치대학교의 방향성

현재 강릉시 9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자치대학교의 개설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21개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도록 주민자치회의 설립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주민자치회의 설립을 보다 원활하고 무리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진행되어야 할 일은 주민들에게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 32년 간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필요성, 향후 방향성, 내 삶의 변화에 대한 피동적 수용자세 등으로 인해 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여기는 등 자치회 참여가 낮다. 우선 자치회 설립과 그에 맞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자치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자치교육기관을 설립은 시군 이른바 집행부보다는 주민대의기관인 기초 또는 광역단위의 의회가 더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살린 2022년 개교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는 2학기 또는 3학기제 운영을 통해 강릉형 학습 커리큘럼의 개발과 탄력적 운영, 운영과정의 정례화 그리고 생활 자치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3) 강릉시민자치대학 개설

(1) 교육목표와 과정

강릉시민자치대학교의 대상은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21개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회를 주 대상으로 하며 이후 시범단계를 거친 후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으로 점차 확산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교육내용 적으로는 제1학기 입문단계는 자치와 자치분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등 자치분권의 개념적 단계를 거쳐 제 2학기 기초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각종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과 대안 찾기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 자치행정 주체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어 마지막학기인 심화단계에서는 시민자치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치분권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주민의 역할 등을 전달하는 자치분권 강사 또는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등을 맡는 일들을 하는 전문가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핵심 가치

강릉시민자치대학교는 영동권 유일의 주민참여 자치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영동권 수부도시 또는 제일도시로서의 명성이 아니라 인구 23만 여명의 가장 큰 도시로서 한 해 예산 1조2천억원이 넘는 도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환동해본부가 위치한 강원도 동해안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시민리더와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리더를 키워내는 일과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자치역량을 키워내는 일을 통해 강원도의 해양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강릉시민자치대학교의 가치는 협치와 상생, 그리고 시민리더를 통한 다양성의 실현을 충족함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강릉만의 전략 뿐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공동목표를 대변할 필요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그 첫 단계는 체계적 교육이다. 우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민역량의 강화다. 글로컬 시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와의 다양한 접근을 위한 커뮤니티의 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명문화 하고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글로컬시민리더 육성과 활동기반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이수 후 참여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영역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시민자치 실현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충족하고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역단위 소통체계 구축이다. 이는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가 개발한 강릉시 읍면동 주민자치 커뮤니티 ‘동네방네’와 같은 자치 플랫폼의 확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지역의 역할은 자치 플랫폼의 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 어려워진 시대에서는 이를 대신할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의 극대화이다. 플랫폼 구축과 주민자치대학교 개설의 목적은 시민, 의회, 자치단체 간 소통의 극대화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서의 확보, 정책참여의 확대, 주민총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서의 시민대의기관 발족, 사회적 경제 분야의 다양성 확보와 확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 극복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주도, 또는 주민주도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기에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기관 고유의 교육영역의 마련이 요구된다.

(2) 사례분석.....수원시민자치대학

지난 2016년 10월 31일 시작된 수원시민자치대학은 국내 유일의 시민자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시민자치교육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시민자치 1번지'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역량 향상과 민선6기 혁신과제 수행(수원자치역량 강화교육 추진)전략별 실행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추진방향은 시민참여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 그리고 시민참여교육과 거버넌스 정책 연계를 통한 실효적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다변화를 통한 적극적·자발적 교육을 통해 시민 리더십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민자치대학의 목적은 수원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영역별 커뮤니티 디자이너 양성을 통한 수원형 시민참여 정책의 내실화이다.

수원시민자치대학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걸어 온 길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4. 13. 2021년도 1학기 개강 - 5개 학습과정(비대면)
 - 학습과정 : 온라인 나도 주민자치위원 / 온라인 나도 통장 / 온라인 갈등조정전문가 / 온라인 회의진행전문가 / 온라인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 수료생/수강생 : 133명/148명

- 2020년 7. 16. 2020년도 여름학기 개강 - 2개 학습과정(비대면과정)
(온라인 나도 주민자치위원 / 온라인 나도 통장)
 - 11. 2. 2020년도 가을학기 개강-5개 학습과정(비대면)
(온라인 나도 주민자치위원 1차, 2차/ 온라인 나도 통장 1차, 2차/ 온라인 갈등조정전문가 / 온라인 회의진행전문가 / 온라인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 2019년 6. 18. 2019년도 2학기 개강 - 6개 과정
(나도 주민자치(회)위원 / 나도 통장 / 참여와 소통의 비법, 퍼실리테이션 실전가 /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 자치분권(기초) / 수원시 협업기관 신규입사자
 - 3. 21. 2019년도 2학기 개강 - 1개 과정
(나도 주민자치(회)위원 / 나도 통장 / 갈등조정전문가 / 회의진행전문가 / 참여예산전문가(심화) / 자치와 분권(기초) / 수원시 협업기관 신규입사자)

- 2018년 3. 6. 2018년도 1학기 개강 - 8개 교육과정

(나도 주민자치위원 / 나도 통장 / 회의진행전문가 I / 갈등조정전문가(기초) / 참여예산전문가(심화) / 자치와 분권 강사양성 / 공동체 커뮤니티 리더 / 생물다양성 조사 및 모니터링)

- 2017년 9. 12. 2017년도 3학기 개강 - 8개 교육과정

(나도 주민자치위원 / 나도 통장 / 행복한 아파트만들기 / 회의진행전문가(심화) / 갈등조정전문가(심화) / 알기 쉬운 재정교실 / 정조의 개혁정책과 리더십 / 찾아가는 시민의 정부)

5. 23. 2017년도 2학기 개강 - 7개 교육과정

(나도 주민자치위원 / 나도 통장 / 회의진행전문가(기초) / 갈등조정전문가(기초) / 참여예산 전문가(심화) / 시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조사원)

2. 21. 2017년도 1학기 개강 - 5개 교육과정

(주민자치위원 / 통장 / 아파트입주자대표 / 수원시민의 정부 / 지속가능한 도시)

- 2016년 10. 31. 시범운영 개강 - 3개 교육과정

(주민자치위원 / 통장 / 아파트입주자대표)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교육과정 마련한다는 전략아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열린 교육기회 제공하고 커뮤니티리더 양성 및 활동기반 구축,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교육이수 후에는 참여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영역 마련하며 사회적 연계망을 통한 시민자치 실현,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의 원동력 확보,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역단위 소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기관

고유의 교육영역 마련한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 교육과정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학습대상	일반시민,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시민(확대),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학습단계	-	3단계(입문-기초-심화)	
학습과정	찾아가는 · 시민의 정부	· 시민의 정부(입문) : 이론교육형 · 주민자치(기초) : 참여학습형 · 마을계획(심화) : 마을계획형	
	대상별 · 나도 주민자치위원 · 나도 통장 ·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 공무원 대상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 나도 주민자치위원 · 나도 통장	자치대학형 PBL 학습모형 적용
	주제별 · 시민의 정부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조사원 양성 · 알기쉬운 참여예산(기초, 심화) · 전문회의 진행자 양성(기초, 심화) ·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기초-심화)	(입문) · 온라인 오픈 특강 · 명사특강, 일일특강 · 단기특강 (기초-심화) · 알기쉬운 참여예산(기초, 심화) · 전문회의 진행자 양성(기초, 심화) ·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기초-심화) · 자치분권 강사양성(기초-심화)	
신규사업	-	· 온라인 교육사업 · 교육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사업 · 전국 시민대학 네트워크 구축사업	

입문단계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과정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에 따른 일일강좌, 단기강좌, 명사특강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초 및 심화단계는 연계과정으로 구성하여 한층 심화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심화단계 교육 이수 후 자치대학 및 지역사회로의 인적자원 환원을 통해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18년 상반기에는 자치분권 강사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자치 실현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또한 각 단계의 학습은 대상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구성하여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그밖에도 수원시민자치대학 시작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자치대학의 위상을 공고화 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준비·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자치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및 시민 공동연구 추진, 자치대학형 교육 네트워크(자치대학 및 수강생)확보 및 연계, 대외홍보 다각화 등이 있다.

• 교육과정



수원시민자치대학 대상별 학습은 마을단위에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대학만의 문제중심학습(PBL) 모형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2018년도 1학기 현재 ‘나도 주민자치위원’, ‘나도 통장’ 과정의 경우, 2017년 교육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학습모형에 전문 강의를 포함한 총 15강 중 약 50% 진행 중에 있다.

자치대학형 학습모형은 과정별 담당교수와 보조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과정으로 기획하고, 매주 학습 전·후 회의과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수강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진행한다.

또한 학습자가 직접 교육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찾아가는 참여형

학습과정으로 운영한다.

- 수원시민자치대학 수료 이후

수원시민자치대학 정례 학습과정 중 회의진행 전문가 양성,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참여예산 전문가 과정은 성격에 따라 기초-심화과정을 연계 이수하는 과정으로 수료이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의진행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 수료생의 경우, 18명이 시 정책 관련 토론회 퍼실리테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예산 전문가 과정 수료생의 35명이 시 참여예산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교육과정에서도 수료 이후 지속적인 사후활동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습결과를 연극형태로 재구성하여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2018년도 상반기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2회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수원시민자치대학 내 자치동아리를 구성하여 심화학습을 정기적으로 학습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시민자치대학교 교육 기대효과



- 신진식습득에 의한 주민역량 강화
- 지역의 주체로의 성장을 도모
- 민관교류에 의한 민관 친밀감 형성
- 미래에 대한 대응성 제고
- 선진 주민의식 제고
- 주민복지 향상

<자료: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홈페이지>

4) 시사점

강릉시민자치대학교가 개설될 경우 교육운영 과정은 교육 참가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목표와 교육목표와의 일치성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자치현장에서 느낀 경험의 차이점, 괴리를 통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체자치가 추구하고자 방향과 목표와의 협력적 관계 또는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대상 교육 외에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민단체 등 단체자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행정과 공공기관, 행정과 시민단체 등의 협치 방법론 및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는 자치과정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갈등 등 자치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갈등조정 등 실질적 교육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수원시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2018.04 기준), 수원시 공공기관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수원시 정책 이해 등 기관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부재한 상태이며, 특히 기관 내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미미하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예산계획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교육기회의 장애 많이 노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원 수 15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의 경우 법정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교육기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체자치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며 무엇보다 여러 갈등과 문제들의 해결과정이 협치보다는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체장, 단체자치의 구성원, 주민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이 협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시민자치대학의 활성화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끝으로 수원시민자치대학의 커리큘럼 과정을 통해 강릉시민자치대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관해 알아본다.

수원시민자치대학의 학습방법은 토의형과 강의형, 실습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영역별 학습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먼저 토의형 학습은 과정별 학습목표를 정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강의형 학습은 주제별 개념과 지식습득을 위한 설명형 강의 및 세미나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실습형 학습법은 개념적 이해를 기본으로 사례 위주의 교육과 실습으로 교육성취도를 향상시키도록 했다.

학습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 아카데미(Academy) 과정은

- 사회 및 지역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제별 교육을 통한 시민의 교육니즈 충족

-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사회에서 자발적 참여와 소통촉진을 위한 시민교육 지원

두 번째 자치 메이커스(Makers)는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체험적 학습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리더십 역량 향상 도모

- '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자치 영역을 확장을 통한 생활자치 실현

그리고 학습전달 방법은 자치분권 개헌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시민의 정부 공고화, 행정동 단위에서의 자치계획 수립 지원,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방향 및 단체원 교육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학습법을 지향하고 있다.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 수강신청: 수강신청 1단계

①회원가입하기

② [학습과정]-[학습과정안내]-학습별 강의커리큘럼 자세히 확인하기

③ ②번 동일화면 하단의 수강신청버튼 클릭

■ 수강신청2단계

① 수강신청 선택 학습과정 확인 후 다음단계 클릭

② 수강신청 중 목록 - 오른쪽 체크박스의 체크 유무로 최종 수강신청 과목 선택

■ 수강신청3단계

① 수강신청 과목과 수강료 최종확인 후

② 기본입력정보 확인 후 결제진행

■ 수강료 납부 및 감면

①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방식 | 무통장입금 또는 온라인카드결제

§ 수강료 납부기간 | 별도 공지를 따름

* 단, 수강접수는 수강료 납부순으로 선착순 마감.

§ 수강료 부과기준

학습누적시간	수강료 (원)
5 시간 이하	10,000
6 시간 ~ 16 시간 이하	30,000
17 시간 ~ 30 시간 이하	50,000
31 시간 ~ 50 시간 이하	70,000
51 시간 ~ 70 시간 이하	90,000

아울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원하는 정보와 수강신청, 지난 강의 듣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 김선희 연구원장의 인사말 중 “시민의 시대에 내실 있는 시민 자치는 깨어있는 시민의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수원시가 추구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려면 시민이 스스로 주권의식을 갖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협동하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의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수원시민의 참여의식을 일깨우고 크고 작은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풀어가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평등한 시민의 집합체이듯이 지역의 리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입니다. 시민자치대학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는 교육대상별 과정과 교육주제별 과정이 있습니다. 나도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은 교육대상별 과정을 택하시고, 특정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주제별 과정을 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문제를 찾고 답을 찾아가는 수원시민자치대학 “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 바로 강릉시민자치대학교 개설의 목적이자 주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2. 강릉 청년 열린 정치대학교 개설

1) 개설 배경

각 정당의 청년 정치학교 개설에도 불구하고 2030의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란 역시 장년층 이상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전통 유교의 덕목인 장유유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애들이 그런 걸 뭐하러 알려고 하느냐’ 식이다. 혹은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 즉 정치는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 정도나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 신라의 화랑제도를 보면 나라를 가장 걱정하는 그룹은 당시 나이가 어린 젊은 이들의 조직체였다. 근·현대 들어서도 4.19혁명을 시작으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6.29선언을 이끌어 낸 민주화운동의 시작과 끝도 청년들이 이끌었다.

우리 역사의 굴곡마다 청년, 대학생이 주도하지 않은 사건을 찾기는 힘들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를 비롯해 1980년의 봄을 알린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역시 부산과 마산의 청년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짧은 역사의 민주화 과정에서 청년은 언제나 그 중심에 서있었음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듯 청년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인공이었음에도 586(50대, 80년대 학번, 60~69년생)세대만이 민주화 과정의 공로를 인정받는 등 과실을 독점함으로써 청년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최고 포식자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7년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2007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2019년 이후 코로나19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운 사회가 되면서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80년대 청년들이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90년대 이후는 취업 등 정치보다는 개인 스펙 쌓기와 취업이라는 개인 발전에 더 매몰된 듯 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자조적 세대로 통칭

되었다. 열정페이, 희망고문에 이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조국사태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서울지하철공사의 채용특혜 등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기회와 과정의 불공평 등에 따른 기성세대와의 갈등의 골은 이 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심화되었다.

청년 낙선자들이 말하는 '정치 안전망'

<p>“기성 정치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청년 정치인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p> <p>“청년 프로젝트도 기여도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좋겠다”</p> <p>더불어민주당 정다은</p> 	<p>“각 정당의 연구소에서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공간과 커리큘럼을 만들고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면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 것”</p> <p>국민의힘 김용태</p> 
<p>“당에서 선거비용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11년간 정당 활동을 하며 누적된 빛이 많다”</p> <p>“일상적인 정치인은 후원 경로가 없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p> <p>정의당 정혜연</p> 	<p>“거대 양당 후보 외에는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특히 이번엔 코로나 탓에 선거운동이 너무 어려웠다”</p> <p>“지금은 방송에서도 청년 정치인의 출연 빈도가 낮아진 것 같다”</p> <p>기본소득당 신지혜</p> 

“줄서기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 필요”

<2020. 10. 14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낙선6개월 라이더가 된 청년 후보]

<하>청년정치 리부트를 위하여, 기사, 사진, 서울 신문>

각 정당은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치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는 하였으나 결과는 사진에서 보듯 참담함으로 끝났다.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청년정치인들이 기성정치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자생적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치관 세대교체’에 대한 희망을 품고 지난 4·15 총선에 나섰지만 기성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청년 낙선자들은 각자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각양각색이었지만 구태의 기득권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믿음만은 같았다.

이들의 지적을 요약하면 다른 직업들에 비해 정치인은 커리어 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즉 어떤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 먹고살기 위해 또 학자금 용자 등을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진입하지 말라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진입의 장벽을 제도적으로 없애야 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들을 위한 하드웨어인 공간과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또는 과정 등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젊은 세대들의 정치는 커다란 이념보다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등 사회의 불합리한 여건들의 개선에 더 목말라 있음은 우리 정치계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용(정치자금)이다. 현행 선거법 제도 하에서 기초의원예 출마할 경우라도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의 정치과계법 상 후원회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신인에게는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일부 가능하다고 해도 당선이 불확실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후원금은 더더욱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론은 다양한 수단이 있다. 하지만 가장 신뢰가 가고 실천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당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청년정치인 육성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활정치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진입의 장벽을 낮추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동네,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청년정치학교를 개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한다. 그 예산의 심의는 정치권에서 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치신인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지 않거나 이를 등한시 하는 현재의 정치풍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다.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알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정치에 뜻을 둔 젊은 세대,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유독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황포다. 경제학적으로는 독과점에 해당되며 시장왜곡을 국회가 앞장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나 예산의 지원과 함께 그동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여성할당제 공천을 청년들에게까지 문호를 넓혀주는 일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균등하고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행복추구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하루 빨리 도입,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참신한 청년정치신인들을 발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로 진출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새로운 변화와 지역혁신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청년정치학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각 정당의 청년정치학교 커리큘럼을 비교해본다. 이를 토대로 강릉의 실정에 맞는 강릉형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역사

지난해 국민의 힘 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당선, 현 대표) 신드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과거 민주화의 기수라고 자부했던 586세대가 기성정치 세대화되면서 이들은 청년들의 뒤통까지 찡기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준석대표의 당선은 청년들이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는 자기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향후 선거에서 청년들의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을 넘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둘째, 한국정치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고 이른바 ‘올드 보이’로 지칭되는 기성정치인 중심의 정치행태가 향후 급속히 변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청년정치사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이기훈 박사의 저서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돌베개, 2014, 10)가 분류한 우리나라 청년정치의 역사를 본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2-1. 교육·문명화 ‘청년’ 만들기: 애국계몽기

‘청년’ 靑年이라는 말이 전통사회에서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은 근대적 개념으로 도입되고 정착했다. 과거의 문헌 속에서 ‘청년’은 ‘젊은’ 또는 ‘젊은 시절’을 뜻하는 말이었지, 지금처럼 ‘젊은이’라는 특정 세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연장자 존중 의식이 지배적인 전통사회에서 청년은 세대 주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쟁이 표면화되는 근대 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를 이끌어갈 추동세력을 선정해야 했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릴 만한 새로운 주체를 내세워야 했다. 그렇게 하여 근대의 문턱에서 ‘청년’이라는 세대 주체가 도입된다. 1890년대에 도입된 ‘청년’은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이 진행되면서 문명개화론과 결합하여, 이전의 봉건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청년은 새로운 학문(신학)을 배워 몰락해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국민’이 될 수 있었다. 근대 국가에 대한 열망은 교육을 통해 개화되고 문명화된 청년상을 이상적인 국민으로 제시했다.

2-2. 근대적 개인의 출현·민족 선도 ‘청년’ :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조선 사회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는 일본 유학생이었다.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국의 현실은 ‘민족’이라는 운동단위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 유학생들은 잡지 『학지광』을 중심으로 “민족의 문명화를 선도하는 집단”은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표명한다. 청년은 ‘피교육자 되는 동시에 교육자가 되어야 하고 학생이 되는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자수자양自修自養하는 세대로서 민족을 선도해야 했다. 자수자양하는 청년은 개인으로서 자의식을 갖춘 근대적 인간을 의미했다. 근대적 개인주의라고 할 만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유행하는 문화주의 철학과 윤리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이광수와 최남선 등 이후 최고의 지식인으로 군림하게 되는 일본 유학생 세대는 사실상 자신들 스스로가 민족을 깨우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1910년대 조선 사회에서 이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세대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구자적 선언이었다. 이들이 가는 길은 곧 역사가 되었다.

2-3.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청년’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다: 1920년대

‘청년’ 개념을 본격적으로 선취한 것은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이다. 민족주의 진영은 조선 사회의 사회운동을 이끈 양대 축이었는데, 일본 유학생들이 제시한 ‘민족의 문명화’와 3·1운동으로 촉발된 민족자주의 뜻을 계승하면서, “근대화, 문명화를 선도하는 주체이며 민족을 통합하는 상징”으로 청년을 이해한다. “이들이 이상으로 제시한 청년이란 수양을 통해 근대적 합리성을 내면화하고 문화운동을 이끌어가는 계몽적 주체였다.”(313쪽) 민족주의 진영의 다른 한편에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사회주의 혁명을 이를 전위로 청년에 주목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는 프롤레타리아라는 특정 계급인데, 조선 사회는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급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되기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청년 주체의 자리를 마련한다. 프롤레타리아 전위 계급이 되기에 청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민족주의 진영은 귀농운동과 농촌 계몽이라는 전략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다. 이는 1930년대 초반 브나로드 운동과 문자보급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민족주의 청년론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총독부 권력의 청년론과 구별되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제국주의 권력의 청년론으로 흡수되어버린다. 사회주의 진영의 청년론도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세대론적 주체보다는 계급론적 주체에 더욱 집중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강화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청년론을 개진하지 못하다가, 후반에는 사회주의운동이 불법화, 지하화되면서 그 세를 잃는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다른 경쟁을 벌이는 데 ‘청년’이 그 중심에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꿈꾸는 사회운동의 양대 세력이었던 두 진영은 ‘청년’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해야 했다.

2-4. 체제 친화형 청년, 파시스트 청년, 그리고 병사형 인간: 1930 ~ 1940년대

1920년대의 청년 담론은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청년’을 부각시켰다. 이때 청년은 국가 권력에 종속되기보다, 좀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이르러 제국주의 권력은 청년 담론을 전유하여 식민 통치에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사회운동의 주체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해 훈육되는 주체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은 청년의 활기와 진취성을 격하시켰다. 대신 ‘착실’하고 생활에 충실한 ‘모범청년’을 이상화된 청년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기존에 청년이 지녔던 정치사회적 의미를 탈각시킨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체제에 불만을 갖기 쉬운 청년을 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청년을 통제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했다. 중앙 권력이 통제 정책을 만들어 청년의 저항성을 순치시키고 ‘선량한 공민’으로 청년을 배치했다. 중앙 권력에 의해 통제되어 체제와 결속한

청년은 국가 정책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가교로써 이용되었다. 권력과 지역사회를 매개하는 이른바 ‘중견청년’이 그것이었다. 한편 파시즘이 대두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광수 등의 일부 지식인들은 ‘영웅’, ‘의지’, ‘힘’ 같은 수사를 써가며 속류 영웅주의적인 청년론을 유포했다. 주운성은 『열혈청년론』에서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영웅으로 숭배하는 파시스트 청년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근대적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며 입신출세와 세속적 성공을 강조하는 청년론이 확산되었고, 그럴수록 청년의 의미는 더욱 탈정치화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총력전 체제가 가동되었을 때, 청년은 전시 동원의 제일선에 서게 된다. 일제는 청년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청년상을 주입한다. 일사불란하게 청년을 조직화하는 청년단과 훈련소를 만들어 청년을 훈련시키고 이른바 ‘연성’ 鍊成을 통해 황국군인으로 양성했다. 1930~1940년대 식민지 조선 청년은 체제 친화적이고 착실한 젊은이로 호명되고, ‘힘’과 ‘영웅’에 의지하는 파시스트로 지향되기를 강요받다가, 마침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병사형 인간으로 만들어진다.

2-5. 극우 폭력의 대명사로 전락한 ‘청년’ : 해방공간 ~ 1950년대

1945년 해방이 찾아왔을 때, 이 땅의 정치 공간은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된 조선 사회는 정당은 물론이고 10년 이상 언론과 결사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252쪽)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해방공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청년과 학생들이 치안 유지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에게 국가 건설의 역군, 건국의 초석이라는 새로운 역할” (251쪽)이 주어진 것이다.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해방공간은 ‘정치’가 끊어 넘칠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설하고 시위했다. 길거리가 바로 정치 미디어였고, 이 시기 청년의 전형은 ‘가두청년’이었다. 파시스트 권력이 떠난 자리에서 청년은 새로운 정치를 열망했으며, “정치세력은 이런

청년을 더욱 정치화하고자 했다.” (252쪽) 해방공간에서 처음 주도권을 잡은 것은 좌익이었다. 좌익은 조선청년총동맹(청총)을 조직하여 청년으로 하여금 “인민을 대변하는 투쟁 주체”가 되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1945년 말부터 좌익이 주도하는 정국을 흔들어놓기 위해 우익 정치세력과 청년단이 결탁하여 좌익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투쟁은 우익이 좌익에게 폭력을 가하는 좋은 명분이 되었다. 이후 해방공간은 정치 테러와 폭력으로 점철된다.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을 때 남한 내 좌익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것도 우익 청년단이었다. 우익 청년단은 국가 만들기가 폭력의 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사실 청년단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군인과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월남한 반공청년들이 중심이 된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 또는 서청)는 ‘제주 4·3 사건’ 등에 투입되어 양민 학살을 주도하였고, 대한청년단(한청)은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선봉에 섰다. 이승만은 청년단을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전위집단으로 활용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1950년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청년’은 극우 폭력의 대명사였다. 저자는 이 시기 청년의 이미지가 매우 “우울하고 퇴폐적이었다”고 지적한다.

2-6. 청년, 혁명과 저항의 주체로 부활하다: 1960 ~ 1970년대

1920년대 이래 1930년대 초반까지, ‘청년’은 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취적인 주체였다. 그러나 권력이 ‘청년’을 전유하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 이후 1940년대 총력전 체제와 해방공간을 거쳐,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까지 ‘청년’은 국가권력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당하는 수동성을 면치 못한다. 이러한 국면을 다시 역전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4월 혁명(4·19)이었다. 4월 혁명은 중고교생, 일반인,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한 거국적 봉기였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4월 혁명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명받은 집단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 대학생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특권 계급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건, 4월 혁명을 주도한 ‘청년 학생’은 중고교생이었고, 대학생은 비교적 늦은 시점에 혁명에 참여했는데, 혁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 새로운 세대 주체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4월 혁명이 ‘청년’의 개념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대학생이 4월 혁명의 유일한 주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4월 혁명이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생’을 처음으로 청년 주체로 발견한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한다. 이쯤하여 ‘4·19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은 청년 담론의 중심에 자리한다.

1970년대 ‘청년문화’ 논쟁은 억압적 통치체제하에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접화된 현상이었다.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문화는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문화적 저항이라는 우회로를 경유하여 억압적 정치체제에 균열을 내고자 한 것이었으나(김병익), 정작 당시 학생운동권으로부터 공식적 인증을 받지 못한다. 청년문화는 그저 대학 사회의 하위문화 정도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대학 사회의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민족주의 성향과 엄숙주의의 영향”(306쪽)이 작용한 이유도 있었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시대에 학생운동의 전략은 우회적일 수 없었다. 대학생들은 ‘민족, 민주, 민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여야 했으며, “민족·민중문화와 학생운동을 연결시켜 새로운 저항의 모델을 제시”(308쪽)해야 하는 ‘구국’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2-7. 지금의 ‘청년’은 무엇인가?: 역사가 현재에 묻는 질문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명멸한 ‘청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가 ‘청년’을 필요로 하고 전략적으로 호명한 측면이 있었지만, 비교적 청년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을 때 ‘청년’의 의미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이었다.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서 내세운 청년은 역사를 이끄는 전위였고, 1960년 4월 혁명에서 청년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젊은 사자들’이었다. 1970년대 이후 대학생은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된다. 이에 비해 국가 권력에 의해

호명되고 이용되었던 청년은 체제를 유지하고 비호하는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 1940년대 침략전쟁의 첩병이 된 청년이나, 해방공간과 1950년대 정치 폭력에 앞장선 우익 청년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시대를 만들어가는 전위가 되느냐, 국가 권력에 포섭되는 수동적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청년은 그 모습을 완전히 달리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은 어떤 모습일까? 청년이 사회의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와 기업집단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말단으로 취급되고 있는가? 역사가 현재에 묻는 질문이다.

저자는 현재의 젊은 세대, 청년정치를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방향성과 관련해 일관된 논리가 있다. 그것은 자유의 힘이다. 청년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노마드’ 들이라고 할 수 있다.

586세대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려 않는다. 그들은 늘 방랑을 꿈꾸고 세계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인터넷 글로벌 세상이 가져다 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대의 자유권리이다. 이들에게 지방의회 의사당 안에, 국회 의사당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리에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다. I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이념적 논쟁이나 진영의 논리는 그야말로 사족(蛇足)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특징은 정치 분야만 유독 자신들의 노마드적 사상이나 자유를 향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젊은 세대,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한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은 과거 어느 시대에 비해 치열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이후 본격 등장한 각 정당들의 청년정치학교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① 더불어민주당 : 청년정치스쿨

청년정치스쿨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2021년 상반기까지 제11기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제12기까지 진행이 되었다. 청년정치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정치관계법, 정치 커뮤니케이션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 12기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제 12기 청년정치스쿨 강사진

				
이재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립 국회의원	이광재 경남 함안시립 국회의원 함안향토지사	박영선 대전 중구서민복지개발 위원장, 구공공 국회의원	도종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국회의원 위원장부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립 원곡초시립교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수강기간 2021년 8월 27일(금) ~ 8월 29일(일) **수강방법** 온라인 ZOOM

모집기간 2021년 8월 13일(금) ~ 8월 22일(일)
*8월 24일(화), 모집결과 개별통보 예정 **수강료** 1만원

지원자격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만45세 이하 청년

지원방법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gfNP15foZuyn3Xac8>)

수료지특전 수료증 발급 (출석 100% 기본)
우수 수료자 전국청년당 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표창장 수여
동기회 네트워크 구축
당내교육연수 시간 인정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 및 선출직공직자 명가위원회 규정 참고>



청년정치스쿨
구글폼 접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모집요강 포스터(출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온라인) 8/27(금) 1회차 : 정치와 메시지			
	주 제	강 사	비 고
19:00 ~ 19:01	청년정치스쿨 오프닝	사회자	
19:01 ~ 19:30	개회사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개회사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축 사	송영길 당대표	
	축 사	윤호중 원내대표	
19:30 ~ 21:00 (1교시)	미정	박영선 前장관	
21:00 ~ 21:10	질의응답 및 폐회	사회자	
(온라인) 8/28 (토) 2회차 :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주 제	강 사	비 고
13:00 ~ 14:00 (1교시)	정치관계법	선거관리위원회 강사	
14:00 ~ 15:30 (2교시)	나와 세상을 바꾸는 스피커	이재정 의원	
15:30 ~ 17:00 (3교시)	미정	도종환 국회의원 (前문체부장관)	
17:00 ~ 17:10	질의응답 폐회	사회자	
(온라인) 8/29 (일) 3회차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정부와 국회			
	주 제	강 사	비 고
13:00 ~ 14:00 (1교시)	민주주의와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박인경 강사(재움과 성장 상담센터 대표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	
14:00 ~ 15:30 (2교시)	대한민국 위기 극복 자치분권의 힘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15:30 ~ 17:00 (3교시)	미정	이광재 국회의원 (前강원도지사)	
17:00 ~ 17:20	폐회사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강의 내용(출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② 국민의힘 : 청년의 당

지난 대선 홍준표의 국민 속으로! 서민 속으로! 청년 속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청년당원 가입’ 코너도 따로 만들어 청년을 정치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6년부터 운영했던 청년미래포럼에는 5천명이 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거쳐 갔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치 프로그램도 많고 역사도 당연히 길다.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가 6일부터 시작한 3개월 일정의 ‘비(Be)정치회담’은 35살 이하 청년 보수를 대상으로 한 정통 청년정치학교를 표방한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세대 교체를 통한 쇄신을 강조하며, 당내 벤처 격인 ‘청년의당’을 띄워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 이슈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 등 지도부는 기존의 당내 청년 조직의 문제점으로 의정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되고, 정치 훈련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계파로 운영돼 개방적이지 못하고, 개개인의 특성보다 사회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발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22일, 독일 기민당의 ‘영 유니온(JUNGE UNION)’을 모델로 한 ‘한국형 영유니온 조직’을 당내에 설립. ‘국민의힘은 2021년 4월까지 당의 국고보조금 5%를 별도의 예산으로 제공하여 회계 독립성을 갖추고, 청년의힘 지도부는 중앙당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청년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격을 얻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청년의힘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예산권, 인사권,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가지며 매주 1회 이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 18~39세 당원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만 16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당원 제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구성원 단위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장·단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체 싱크탱크 ‘청년정치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③ 바른정당 : 청년정치학교

당의 모토인 ‘개혁보수’와 ‘정치인재 양성’을 결합한 청년정치학교를 열었더니, 일반인 24만원, 대학생은 12만원, 자기 돈 내고 장장 6개월짜리 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는데도 50명 모집에 330명이 몰렸다. 최종 합격자는 모집정원을 2배 가까이 초과한 90명이다. 15살 중학생부터 38살 직장인까지, 107석 자유한국당이 아닌 20석 바른정당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까지 5기가 진행됐다.

모집기간
2017. 7.18(수) ~ 8.18(토)

모집인원
50명

지원자격
만 15세 이상 38세 이하 누구나

지원방법
바른정당 홈페이지

수강료
24만원

합격자 발표
2017. 8.30(수), 바른정당 홈페이지

문의처
바른정당 조직국 02-2070-5813

주최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우수출발생 특전
바른정당 사무처 채용 시
가장중 의용 후 차우주학생 선발 우선
취업 관련 유망처
바른정당 대표 명의 추천서 발급

각종 선거 출마 시
당 공인선거 가인용 유용
바른정책연구소 정책 자문위원
추진 기획 책임
차우주학생, 모험성 수여
(영 대표 영의)

청년 교육목표

개혁보수 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할
정치인재 양성

정치 인재상

개혁보수 이상을 실현하는 청년
사회를 변화시킬 리더가 되고자 하는 청년
정리적이고 헌신적인 청년

강사진

박영준, 김우진, 김계원, 유승민, 이태훈, 황영국, 허태영
김민석, 김민준, 김우영
김동욱 (서울대 교수), 신영식 (연세대 정임교수),
조승 (전 중앙대교수), 홍준호 (한신대 교수),
이원배 (한신대 기획이사), 정재승 (KAIST 교수)

제3기 청년정치학교 커리큘럼

주차	날짜	강의주제	강의내용	강의자
-	3월 23일	합격자 OT	인문 기사 작성법	실무강의
1	3월 25일	입학식	-	당대표 및 학교장, 의원, 당직자 참여
2	4월 1일	정치개론	정치란 무엇인가?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3	4월 8일	정치 I	한국 사회의 정치이념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4	4월 15일	정치 II	한국의 정치체도와 미래	강판택 서울대 교수
5	4월 22일	(종합토론)	〈조별 토론 및 발표〉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미니세미나 방식으로 추진
6	4월 29일	경제 I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최영기 세 한국노동연구원장
7	5월 13일	경제 II	한국형 자본주의의 미래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8	5월 20일	(종합토론)	〈조별 토론 및 발표〉 청년일자리 해결과 기초소득 도입 필요성	미니세미나 방식으로 추진
9	5월 27일	SPECIAL	모의 국정감사	실제 국정감사 형식 운영
10	6월 3일	외교안보 I	북한 비핵화와 안보	신원식 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11	6월 10일	외교안보 II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김준영 한동대 교수
12	6월 17일	(종합토론)	〈조별 토론 및 발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미니세미나 방식으로 추진
13	6월 24일	디자인생강 I	해커톤 방식 정책 제안 프로그램	이형기 보일팩트 대표
14	7월 1일	디자인생강 II	해커톤 방식 정책 제안 프로그램	이형기 보일팩트 대표
15	7월 8일	한국의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정치경제	윤종영 국민대 교수
16	7월 15일	특강	학생이 만드는 강의	학생이 원하는 강의자 선택
17	7월 22일	역사와 정치	역사와 정치	유성운 중앙일보 기자
18	7월 29일	리더십	리더십과 자기 PR	김지연 한국로컬문화상임이사
19	8월 5일	SPECIAL	정치인과의 대화	당대표 등 학생 추천 의원 2인
20	8월 12일	졸업식	-	당대표 및 학교장, 의원, 당직자 참여
-	8월 24일	졸업여행	청년정책캠프와 결합	추후 계획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모집요강 포스터/커리큘럼

④ 정의당 : 청년 정치학교에서 시작하라!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내 손으로 바꾸고 싶은 당신!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믿는 당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정의당이 준비 했습니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정의당의 청년정치학교는 ‘맛있는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앞아서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말하고 경험하는 살아 있는 정치 교육▶복지부터 경제, 노동, 청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해외 진보정치의 생생한 사례를 들을 수 있는 특강▶정의당의 국회의원 등 간판 정치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기회▶수강생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정치학교를 직접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만 35세 이하 청년 누구나이며 모집인원은 70명, 수강료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정치가맛있다!

푸르른 청년정치를 꿈꾸는 그대,
이곳, 정의당 청년정치학교에서 시작하라!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 앞아서 듣기만 하지 않고 직접 말하고 경험하는 살아 있는 정치 교육
- 복지부터 경제, 노동, 청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 해외 진보정치의 생생한 사례를 들을 수 있는 특강
- 정의당의 국회의원 등 간판 정치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기회
- 수강생 네트워크 형성 함께 정치학교를 직접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

<강사진>

내부강사 _ 이장미(당대표, 노회찬(원내대표, 심상정(국회의원, 천호선(전 정의당 대표, 전 청와대 대변인))

외부강사 _ 오건호(세이브미드는복지국가, 정태인(노동미래, 내연구소), 이산욱(로보 작가), 김민수(정책연구원, 강원국(서울형의 글쓰기 지사)

해외정치특강 _ 장석준(미래정치센터 부소장, 김민권(정치철학자, 박정훈(여설다 빈즈의 대표 지사, 청년비판구제)

대상 _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만 35세 이하 청년 누구나
모집기간 _ 2017년 9월 12일(화) ~ 2017년 10월 10일(화) (신청순,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모집인원 _ 70명 **수강료** _ 10만 원 **신청링크** _ [http://bit.ly/ 정의당청년정치학교](http://bit.ly/정의당청년정치학교)
문의 _ justice.youth.school@gmail.com, 070-4640-2398
참가자 명단 확정 _ 2017년 10월 11일(수) 참가자 개별 통지
교육기간 _ 2017년 10월 15일(일) [입학식] ~ 2017년 12월 17일(일) [졸업식]
 ※상세 강연 날짜와 시간은 프로그램 일정 참고



3) 시사점과 강릉형 모델의 발굴

지방의회가 청년들을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의무나 책임은 없다. 오히려 청년정치학교를 개설함으로써 지지 세력의 확장을 꾀한다는 식의 오해와 매번 선거에서 청년후보와 붙을 수도 있기에 득권을 위협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정치학교를 개설함은 상당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민간 시민단체, 대학교의 몫일 수도 있다는 일반적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시의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지역소멸 및 인구소멸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불과 몇 년 후면 청년 1인이 책임져야 할 노인의 인구는 5명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 지역은 현재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청년들의 수 년 후 맞이할 사회 이슈 중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상시노출이라든지, 교육문제, 일자리 문제, 결혼문제 등 현재의 청년들이 해결해야 과제의 시급성이 산재해 있으나 이에 대한 해법은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이 그동안의 정책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와 같은 면도 있지만 지역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청년정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청년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다. 사회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그 동력을 청년들에게 맡길 이유가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청년정치인들이 곧 닥칠 자신들의 위기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다양한 해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책임전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는 다양성을 그동안 우리는 아니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노마드 청년의 자유권리선언’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청년정치이다.

강릉이 현재 앓고 있는 제반 문제점, 그리고 산업과 경제, 공무원조직이 지역의 규모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이상 현상 등에 대한 기존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시각에서 이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기대를 진영의 논리로 매몰된 정당보다 지

역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시의회가 안음으로써, 또 발전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강릉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보다 명확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 참여예산제

[1] 과업의 목적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예산제의 시행은 200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상 임의 규정으로 시행되다가 2011년도부터는 의무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2015년부터는 지자체주민참여예산제의 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재정자율성 확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차원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정이나 주요 사업부문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민의 참여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다. 즉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기초한 이 제도 운영이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지역마다 각기 다른 살림살이 규모라든지 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용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이를 주민들이 어떻게 계량화해 평가할 것인가라는 평가방법 역시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와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강릉시에 맞는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모델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간담회 및 인터넷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주민 공모사업 선정·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연구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활성화 여부도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를 운용함으로써 발견되는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대안의 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또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운

영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과업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이를 상세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과 기초, 대도시와 농촌 등 지자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매뉴얼을 개발을 전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기구의 구성·운영, 참여 형태와 방법,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평가방법 및 지표의 개발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 강릉실정에 맞는 평가방법과 지표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강릉시 유형별 운용모델과 연계한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개발해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자체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일반회계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 중심의 주민참여는 지방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방안 등을 연구하려고 한다.

①예산 편성 외의 예산과정(집행, 모니터링 및 결산 등)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 ②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③기타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타 시군 사례 연구

행정안전부가 2020년 발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집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사례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참조로 강릉시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수요 예측 빅데이터 분석

■ **자치단체명** : 대구광역시

■ **사업명** : 주민참여예산사업 빅데이터 분석

■ **사업효과** : 지역 사업자들의 경제활동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우수사례 내용**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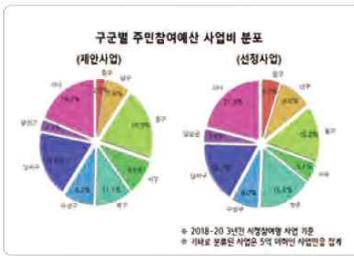
- 다양한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의 데이터를 분석 필요
-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동적인 주민제안사업 접수가 아닌 능동적으로 주민수요에 대응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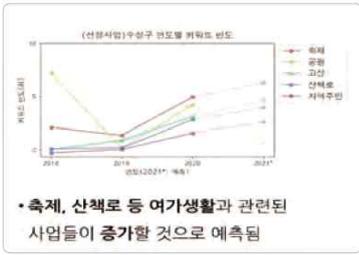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0. 9. ~ 10.
- 분석대상 : 2018년-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선정 사업 8,265건
- 분석내용
 - 2020년 주민참여예산 구군별 사업 특징 분석
 - 2018년-2020년(3년간) 선정사업 분석을 통한 추이예측 및 사업비 분포 분석
- 홈페이지 게재 내용
 - 워드 클라우드 : 2020년 구·군별 제안사업 특징 주요 키워드 현황
 - 구·군별 사업비 분포 : 2018년-2020년(3년간) 선정사업 분포
 - 추이예측 그래프 : 2018년-2020년(3년간) 선정사업 2021년 사업선정 추이 예측
 - 맵핑 시스템 : 대구시 지도를 활용한 2020년 선정사업 위치 분포 시각화



주요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구·군별 사업예산비 분포



• 축제, 산책로 등 여가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추이예측 그래프



매핑 시스템

영남일보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009면 사회

대구 주민제안사업 빅데이터 통계 공개 지역별 특색 한눈에

대구는 주민제안사업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통계 자료를 공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민제안사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각종 자료들을 주민·지역 사업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구·군별 주요 사업의 키워드·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측 그래프·지도에 각 사업 시행 위치를 표시한 맵핑 시스템 등 주민제안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일보

● 구군별 사업 분석결과

구 군	특 징 (2020년 제안사업)	추이예측 (2018년-2020년)
중 구	• 쓰레기, 골목, CCTV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증가 추세에 있음	• 도심공원인 국제보상운동공원 관련 사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동 구	• 쓰레기, CCTV,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사업이 증가하여 관심이 필요함	• 보안등, CCTV, 방법용 등 생활안전 관련 사업이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서 구	• 철로변 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공원 관련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쓰레기, 불법투기 등과 관련된 사업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남 구	• 노후, 안전, 정비공사와 같은 시설정비 사업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마을축제 등 지역 공동체 관련 사업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됨
북 구	• 쓰레기, 무단투기 등 쓰레기 문제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운동기구 관련 사업의 증가가 예측되는데, 금호강변 주변 정비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됨
수성구	• 공원, 그늘막 등 공원 정비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축제, 산책로 등 여가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달서구	• 횡단보도를 비롯하여 교차로, 알리미 등 교통안전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활안전, CCTV 관련 사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달성군	• CCTV, 카메라, 안전 등 치안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창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관심이 필요함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도전!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 **자치단체명** : 대구광역시

■ **제안자** : 대구광역시 남구 김○○

■ **사업명**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 **사업비 / 기간** : 42백만원 / '20.2월 ~ '20.12월

■ **사업효과** : 경력단절여성에게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사회적 지위 향상 기반 마련

■ 우수사례 내용

● 추진배경

- 대구지역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0.8%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4%로 20%p 이상 차이가 남
-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경력단절여성이 안정적인 재취업 기반을 마련하여 대구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률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총사업비 : 42백만원
- 사업규모 : 3개 과정 80명
- 사업내용 :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교육과정별 세부내용 〉

(단위 : 천원)

교육과정	지원대상	교육인원	교육내용	교육시간 (권장기준)	사업비
SNS 마케팅 전문가 양성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1회 20명 정도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실습 등	220시간	20,000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1회 20명 정도	정리수납 교육 및 실습 등	100시간	12,000
공동주택 경리실무자 양성		2회 40명 정도 (1회 20명)	전산회계, 공동주택회계 교육 및 실습 등	240시간 (1회 기준)	12,000

● 관련내용 및 사진

사업명	추진내용
SNS 마케팅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SNS 마케팅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선발 면접 -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실시 200시간/ 총 50일 - 1:1 심층상담, 구인처 발굴, 사후관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SNS 마케팅 전문가 양성</p>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홍보/교육생 모집 - 정리수납 2급 이론(15H), 실습(6H) 교육 진행 - 정리수납 1급 이론(27H), 실습교육(24) 진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정리수납 전문가 양성</p>

사업명	추진내용
<p>공동주택경리 실무자 양성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경리실무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세무 이론 및 공동주택 회계 실무 - 공동주택 사무행정 실무(엑셀/한글) - 공동주택 인사노무관리 실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경리실무자 양성</p>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안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열어주는 일종의 여성 복지를 실천하는 사례다.

이는 사회적 관심 또는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제도를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주요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릉시민 자치권 확대 및 강화 방안 연구」

시민자치학교와 주민참여예산제도, 강릉 청년 열린 정치학교 관련 프로그램

■ 시민자치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설문조사 항목

※본 설문은 6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 중 주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자치분권 실시와 관련 강릉시민들의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에 관한 의식조사입니다.

[시민자치학교 운영 관련 설문]

1. 지방자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매우 잘 알고 있음 ②잘 알고 있음 ③보통 ④잘 모름 ⑤전혀 모름 ⑥기타

2. 지방자치의 실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수행 ②민주주의 정착 ③행정능률 향상
④지역문제의 주민 해결 ⑤모름 ⑥기타

기타.....()

3. 지방자치의 성공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자치의식 ②재정확보 ③주민의견수렴 ④대 주민 서비스향상
⑤정부의 지원 ⑥단체장의 리더십 ⑦기타

기타.....()

4.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①매우 높음 ②높음 ③보통 ④낮음 ⑤매우 낮음

5. 지방자치 주체의 주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매우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
지방의회 대의기능					
지방의회 주민의견수렴					
자치단체 주민의견수렴					
자치단체장 주민의견수렴					
공무원 주민의견반영					

6.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의 참여의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참여자 ②감시자 ③납세자 ④수익자 ⑤협조자 ⑥기타

기타.....()

7.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매우 잘 알고 있음 ②알고 있음 ③보통 ④모름 ⑤전혀 모름

8. 자치분권의 이해와 효율적인 지역행정, 정책제안 등을 위해 시민자치학교와 같은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반드시 참여 ②경우에 따라 참여 ③보통 ④참여하지 않는다 ⑤필요치 않다

9. 귀하의 성별은.....남() / 여()

10. 귀하의 연령은.....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1.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12. 귀하의 직업은.....전문직,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주부, 학생,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문]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매우 잘 알고 있음 ②잘 알고 있음 ③보통 ④잘 모름 ⑤전혀 모름

2. 운영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적극적으로지지 ②지지 ③상관없다 ④필요치 않다 ⑤하지 말아야 한다.

3. 운영을 위한 귀하의 견해는

①더 확대해야 함 ②현행 유지 ③축소해야 함

4.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①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②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전문성

③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④주민대상 홍보교육 ⑤기타

기타.....[]

5.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한 분야는 (복수 응답 가능)

①공공질서 및 안전

②감염 병 등 질병관리

③문화관광

④교 육

⑤사회복지

⑥보건

⑦농림축산 수산업

⑧산업/중소기업

⑨도로/교통

⑩지역개발

⑪일자리

⑫기타.....[]

6. 성별.....[]

7. 연령.....[]

- ① 20세 미만
- ② 21 ~ 30세
- ③ 31 ~ 40세
- ④ 41 ~ 50세
- ⑤ 51 ~ 60세
- ⑥ 61 ~ 70세
- ⑦ 71세 이상

8. 거주지.....[] ※ 리 / 동까지

9. 거주기간.....[]

10. 직 업.....[] ※ 직접기업